

투데이 칼럼

농업인을 위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자

어느날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각종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 구조가 변형되어 뒤뚱뒤뚱 걷는 고령농업인들을 보고 핑퐁마을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가 현재 농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 같아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을 지도하는 공직자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농작업 재해(농업인 업무상 재해)는 농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위험요인, 분진, 농약 등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환 또는 안전사고를 총칭한다.

고용노동부 자료(2015년)에 의하면 일반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0.5%이지만 농업인의 업무상재해현황은 0.94%로 약 2배정도 높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장은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민간보험사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에 가입해야만 재해에 의한 사고를 보장

‘농작업 안전보건전문가 육성 농업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 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강한 노동력 유지를 위해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 및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작업 재해보상관리와 국가적 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 국

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안전보건관리 확립, 재해보상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전보건체제 마련, 위험요인 저감조치, 농업인 보건관리 등 농업인 안전재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충분히 사전 예방을 한 후에도 예측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여 농업인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복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직종에 관계없이 형성될 수 있게 이루어지고 농촌현장의 열악한 생활문화 및 의료서비스를 감수하는 농업인에게 부족한 서비스를 대체하는 정책지원이 확대 될 수 있다면 도시로 집중하는 인구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업인의 재해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농업인의 농업안전보건교육과 무리한 작업개선 및 재해보상사업을 수행하는 농작업안전보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끝으로 농업인이 안전영농을 보장받으면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이 고취되고 농작업 재해수준이 선진국 형태로 바뀌는 건강한 농촌, 살기좋은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희망 농촌이 될 것이다.



서정원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사설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전북도는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때마침 군산을 산업·고용 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 내딛는 발을 풀어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지 군산만이 아니다. 경남 쪽에도 5곳이나 지정되었다. 거제시와 통영시와 고성군 그리고 창원시의 진해구와 울산광역시의 동구가 바로 그렇다. 때문에 우리 전북의 군산을 위해 얼마나 되는 금액이 지원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북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발언이라도 도민들은 마음이 급하다. 전북도의 그 전략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줄 일이다. 우리 지역은 거듭된 경제 위기로 한탄 소리가 가득하다. 지난해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 사태에 이어 GM의 폐쇄로 전북 경제가 지진을 만난듯 흔들리고 있으니 왜 아니 그러겠는가. 전북 경제의 혼란은 정부의 고민거리로 떠오를만큼 중대 문제가 되었다.

전북도는 군산시의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안 좋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

는데 속수무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기대밖이다. GM 군산공장의 남은 직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가족 동반해 이주시키고 있는 지금 까지도 그러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방 선거가 코앞이라 그러리라는 짐작이지만 더 다급한 쪽은 군산 지역이다. 전북도는 군산을 위해 더 뛰어야 한다. 자존을 말하고 재무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이다.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군산이 산업·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으니 이제 전북도가 이루어낼 목표는 뚜렷하다.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군산시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언론사들의 인구 동향 보도에 민감해야 한다. 지난 두 달 새 4012명이 줄었는데 군산에서만 534명이 타지로 빠져나갔다. 우리 지역이 쉼빙 고장이 못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할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탈전북’이 예상된다. 도민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운전자들 시민의식 고양해야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아쉽다. 시민의식을 더욱 고양해야겠다. 명절 때면 쓰레기 불법투기나 주차 질서가 문란한 현장 때문에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 데 말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뺑소니 운전자도 많고 무보험 교통사고도 잦다는 보고이다. 정부의 보상 금액을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줄고 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 지역은 그 반대이다.

안 좋은 뉴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운전자 개개인은 잘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뺑소니 운전자와 관련된 것일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뺑소니는 정말이지 악질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고 달아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말든지 상관없다는 작태는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 즉, 사회 현상은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배우게 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내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배워야 청소년들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는다.

닐 수 없다. 그런 뺑소니 운전자 사고가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보험 교통사고가 잦다는 것도 문제이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만약의 사고를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차량은 그게 없다. 심지어 무면허 운전자를 하는 이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차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대포차를 버젓이 운전하는 양태도 있다. 현실이 그러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게 고맙기는 해도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이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피해보상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 전체를 놓고보면 다른 광역시도 지역과 비교해 보상액이 많더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다시 말하지만 도내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배양이 아쉽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 사고를 낸 현장이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니 듣기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라면 곤란하다. 모든 운전자는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독자제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사업용 차량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띠 미착用に 대한 집중 단속과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계도·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단속 시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

때서야 안전띠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답답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꺼려한다. 그러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착용자 치사율은 1.8%이다. 이에 비해 미착용자의 치사율은 7.3%에 달하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으로 받는 충격은 머리 152배, 목 10배, 가슴 47.5배로 더욱 위험하다. 안전띠 미착용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국인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독자제언

학교폭력, 특단의 대책 필요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기 마련이지만, 청소년들의 비행은 날로 다양해지며, 저연령화, 흉포화 되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집단 괴롭힘 등 청소년 비행 유발원인은 핵가족화, 부모의 이혼 등 가정 불화로 인한 애정결핍, 유해환경의 증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경쟁사회로 인한 압박감이나 맞벌이 등 학부모나 사회의 무관심, 스트레스의 누적, 교사의 편애나 청소년 놀이공간의 부족, 빈부 격차에 따른 위화감, 잘못된 학교 전통, 선정적 영상 매체의 범람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피해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피해 학생들로 하여금 등교거부나 가출,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나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 학생 본인의 반항(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일부 시민들처럼)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어려워 무관심해지기 쉬운 것이 최근 일선 학교현장의 현실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사

랑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동태 파악 등 사전관리는 물론이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보호자에 대한 연락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처관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교우관계를 수시로 파악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늘려야 한다. 피해자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친구나 교사, 자원상담봉사자에게 알리고, 신앙생활이나 독서, 취미생활 등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며, 어려운 여건을 스스로 충분히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학교폭력이나 학교의 전통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반시민의 준법정신이 확립되어야 학생들의 준법성도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현상은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배우게 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내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배워야 청소년들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는다.

전호수 진안경찰서 성수파출소장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

